월/요/광/장

고현석

복 주머니를 만들자

사흘이 지나면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이다. 설날에는 세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세뱃돈을 준다. 예전에는 복 주머니를 차고 대보름까지 세배를 다녔었다. 그 복 주머니에 세뱃돈을 간직했는데, 어른들이 직접 넣어주기도 하였다. 복 주머니란 여러 가지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무늬를 수놓은 예쁜 주머니로서,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복을 담는다는 의미를 가진 주머니이다. 그래서 정성들여 만들었고, 선물로 주고받았다.

복을 짓는다고 하고, 또는 쌓는다고도 말한다. 복 주머니에 복을 담으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하고 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짓고 쌓은 복을 담아 둘 주머니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복을 지킬 수 없다. 또 복을 준다고도 말한다. 누가 복을 주더라도 주머니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복 주머니를 만드는 정성, 복을 짓고 쌓는 정성, 복 주머니를 간직하는 정성이 없이 복만 덥석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우리말 가운데 숨어있다고 생각된다.

무엇이 복일까? 예로부터 거의 누구나 바랐던 수(壽)·부(富)·귀(貴)가 여전히 복(福)일 것이다. 달리 말해서, 건강과 재력과 권력(지위)을 가지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들 부러워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일자리가 건강·재력·권력을 가져다주는 기본바탕이다. 젊은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에게도 점차 절실해 지고 있다. 일자리의 창출이 선·후진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지방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었다.

광주·전남은 일자리라고 하는 복을 담은 복 주머니를 몇 개나 차고 있는가? 농업? 공업? IT? BT? ET?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실버서비스? 우리라고 그런 것들을 담고 있거나 앞으로 담아낼 복 주머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이 크고 좋은 복 주머니를 나눠 차고 있는데 비하여 작고 초라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남의 떡이 커보여서 그럴까 싶어 곱씹어 본다. 농업이 복 주머니 노릇을 했던 1960년대까지는 호남의 주머니가 가장 컸다. 70년대 이후 공업이라는 복 주머니를 영남이 차지했다. 이후 꾸준히 강화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은 각종 서비스산업 복 주머니를 독보적으로 키웠다. 과거에 전라도와 함께 서울로, 경상도로 도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충청도는 어떤가? 국민의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IT도, 참여정부가 공들인 BT도, 충청권의 오창단지와 오송단지에 큰 둥지를 틀었다.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큰 복 주머니도 세종시로 가져온다. 의료서비스 복 주머니도 오송과 대구가 수도권과 나눠 갖는 모습이다. 강원도는 굴을 뚫어 마치 수도권에 편입된 모습으로 관광산업 복 주머니를 키웠다.

그렇다면 ET만은 확실히 우리 것인가? 아직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실버서비스 복 주머니만은 확실히 우리 것으로 차지했는가?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닐 뿐이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농업만은 농도를 자처해온 전남의 복 주머니가 독보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가?

호남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귀하고 큰 복을 지어낸 고장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담은 복 주머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누어 찼다. 처음부터 그러자고 만든 복 주머니다. 우리 국민이 절실히 바랐던 매우 소중한 복 주머니지만 일자리를 담는 것은 아니다. 민주의 복 주머니를 만들었던 그 정성과 열정으로 이제는 지역의 경제도 발전시켜보자는 외침과 노력의 세월이 대충 20년이다. 이 세월의 결산서를 미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일까?

누구에게랄 것 없는 설날의 덕담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본다. 당장은 구제역을 잘 막아서 청정지역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광주·전남이 그 복을 밑천 삼아, 이만하면 든든해 보이는 크고 좋은 일자리 복 주머니를 만들어 찼으면 좋겠다. 요즘 말로 하면,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낼 틀이요 그릇이다.

이미 다른 지역이 크고 튼튼한 그릇을 마련해 놓고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큰 흐름이 그 지역으로 가게 마련이다. 그 결과인 일자리도 그렇다. 그러므로 새로운 분야, 남아 있는 분야, 우리 지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선취해야 한다. 정성과 노력 없이는 복을 기대할 수 없다. 크고 넉넉한 일자리 복 주머니를 차고 넉넉한 마음으로 설날을 맞을 때가 머지않을 것임을 기약하면서, 올 설날을 즐겁게 맞기로 하자.

〈민선 2·3기 곡성군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민주,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이율배반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을 놓고 강운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권 유치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사흘 전 광주과기원에서 열린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설명회에서 강 시장은 "현 정부 들어 5+2 광역경제권으로 영남은 두 덩어리, 호남은 한 덩어리로 나눠 근본적으로 불균형적인 구조로 출발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보더라도 당연히 호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박주선 민주당 의원도 "과학벨트 관련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한 법안으로 원천 무효라는 당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총선과 대선이라는 짧은 안목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유치하려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이 과학벨트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 정권교체를 이유로 광주시가 유치 경쟁에 나선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대권을 쥐기 위해선 충청권을 안아야 하고 그 대가로 과학벨트를 주어야 하니 광주시가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이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정권교체=과학벨트'는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내용적으론 차원이 다른 문제다. 충청권은 현재 대덕연구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행정도시 세종시가 건설 중이다. 그런 관점에서 과학벨트 입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없이 당론으로 채택한 '충청권 유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면 정부·여당에 오히려 '영남권 유치'라는 빌미를 줄 뿐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리에 존속살해까지 참담한 경찰 현실

요즘 경찰이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전·의경 가혹행위, 비리에 심지어 존속살인까지 온갖 범죄행위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에 의해 저질러지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찰에 생명과 재산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40대 엘리트 경찰 간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전직 경찰관은 재직 당시 사행성 게임장 동업자를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그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했다. 경찰이 패륜·흉악범죄의 범인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섬뜩하다.

최근 경찰은 전·현직 지휘부가 '함바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조직 폭력배의 상습 도박범행을 고의로 누락한 광주지역 경찰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고질적인 전·의경의 가혹행위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의 참담한 모습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경찰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경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범죄와 부패, 무질서를 척결하긴커녕 그들 자신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무질서를 부추겨 왔으니 경찰의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상황을 몇몇 사람의 기강해이로 빚어진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조직 전체의 환부를 도려내는 쇄신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경찰상 정립을 기대할 수 없고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작금의 경찰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경찰은 총수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뼈를 깎는 자정(自淨)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정부도 경찰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강성두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변론

최근 '공정한 사회'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범죄자들을 변호해온 필자는 '모든 범죄자가 빠짐없이 처벌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명의 미성년자들이 형제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 중 단 한 명만 범죄를 인정할 뿐 나머지 세 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기 때문에 제가 변호하게 된 피고인들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 내용이 파악되고 피고인들을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부터 처음의 선입견이 많이 사라지고 피고인들의 무죄항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미성년자이고, 그 중 한 명은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범죄로 인하여 교정기관에 수용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 와중에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수사 초기의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 범행의 장소나 방법에 있어서도 강도범행의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기에는 매우 대담하여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재판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직도 피고인들이 왜 처음에는 자백하였는지,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 공범은 왜 그런 주장을 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수사초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었다면 피고인들을 처음부터 범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미성년이고, 또한 지적장애까지 있는 상태였기에 이러한 방어권보장이 더욱 절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변호했던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제 역할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고 윤리적, 법적 한계 내에서 최선의 변호를 하는 것이지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법적시스템이 영화에서처럼 모든 범죄자를 한 명도 빠트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빈부, 직업, 성별 등에 상관없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우 받는지 일 것입니다.

오제이 심슨과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유명인을 변호하였던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는 '미래의 법률가에게'라는 책에서 "훌륭한 변호사는 악인을 변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피고인은 윤리가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부유한 자가 두터운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빈민층과 중산층이 제대로 변호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대답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이병렬

발상의 전환이 광주를 바꾼다

신묘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수많은 감격과 시련이 교차한 해였다.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은 감동을 선사했고, G20 정상회담은 국가의 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린 성과로 평가됐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 이르렀고,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한미FTA 비준 문제는 국론 분열과 사회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광주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의 발판을 다졌다.

'시민과의 대화'로 대표되는 소통과 참여의 시정을 구현했고,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생업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했으며, '1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문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가운데 광주 CGI센터 권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 KDB생명빌딩이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올해는 민선 5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향한 힘찬 비상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광주는 시정의 가치판단 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민주·인권과 문화예술, 첨단과학산업의 삼각축을 보다 튼튼하게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를 근간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도심재생과 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기반구축 ▲소통과 인권신장을 4대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 속의 '불편·불공정·불만족'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감으로써 소통 행정을 실천할 것이다. 국내 최초로 인권지수를 개발하고, 광주인권지수헌장 선포 등 인권평화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UN인권도시 지정에 우호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두뇌와 예술적 끼, 뜨거운 열정은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 수 있는 튼튼한 토대이다.

송정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선정과 야구장 건립, 음란광고물 추방, 61개 기업 1조원대 투자유치 등의 결실을 거두며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지역 내에 충만해 있다. 특히 광주가 '대한민국 R&D 특구'로 지정된 것은 상서로운 기운이 이 지역을 휩싸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인 조건을 생각해볼 때, 광주는 분명히 도약하고 비상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광주의 6000여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소명의식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광주의 비상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신묘년 새해 시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한다.

〈광주시 공보관〉

無等鼓

아프리카

찰스 다윈 이후 아프리카는 인류의 고향으로 여겨져 왔다. 진화론에 초기 인류 화석 발견이라는 고고학적 성과, 유전자 분석이 더해진 결과다. 100만 년 전후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했다는 '아프리카 단일 기원론'이 그 뿌리다. 이에 따르면 인류는 세계 어디에 살든 모두 아프리카인인 셈이다. 현생 인류가 여러 대륙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는 '다(多) 지역 기원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아프리카 단일 기원론'은 여전히 대세다.

아프리카대륙에는 현재 54개 국가에 10억 명이 살고 있다. 더러 첨단문명의 수혈을 받은 곳도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선 원시부족들이 자연 그대로의 경이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광활한 세렝게티 사바나 초원을 질주하는 누우떼의 약동은 전율마저 느끼게 한다.

이 생명의 땅은 16세기 이후 300년 이상 서구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며 '검은 대륙'으로 불렸다. 무자비한 착취와 기나긴 예속 아래 자유롭고 용맹스러웠던 역사를 잊어버린 채 굴종의 삶을 살아야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독립했지만 독재와 절대권력의 부패가 이어지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대륙이 되어버렸다.

튀니지 민중의 '재스민 혁명'을 계기로 불타오른 민주화 도미노가 이집트와 알제리, 가봉 등 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주말 수만 명의 시위대와 군병력이 충돌하면서 100여 명이 숨졌다. 5·18 광주민중항쟁이 필리핀 민주화운동과 톈안먼(天安門)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아프리카다/새싹을 내미는/끈기 있게 고집스럽게 다시 일어서는/그리고 그 열매에 자유의 쓰라린 맛이/서서히 배어드는 이 나무가" 50여 년 전 세네갈 시인 다비드 디오프가 예견한 자유와 희망을 향한 아프리카의 혁명이 이제야 꽃을 피우려나보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바다는 미래의 자원 보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동·서·남해 모두 저마다 특색있는 아름다움으로 멋스런 낭만과 추억을 선사한다. 우리 전남에도 다수의 국립해상공원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푸르고 아름답게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에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를 보면 여행의 즐거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쓰레기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더러, 미래의 자원보고인 바다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특히 이 같은 바다 쓰레기는 여객선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니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가 무책임하게 버린 쓰레기 하나가 언젠가 나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야겠다.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쓰레기도 많다고 하니 이 부분도 외교적으로 잘 대처해서 중국의 바다 쓰레기가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김윤지·여천시 안산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